

2020 한국금융학회 특별 정책심포지엄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 과제

2020.6.12.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목 차

- 무엇이 문제인가?
 - 금융위 관료의 문제 1: 금융실명제
 - 금융위 관료의 문제 2: 미래저축은행
 - 금융위 관료의 문제 3: 유재수
 - 민정수석실의 문제: 금감원 직원 중징계 요구
 - 국회의 문제: 인터넷전문은행법 제개정
 - 제도 공백의 문제: 라임 사태
-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 확보
 - 행위감독기구의 감독 역량 확대
 - 준칙과 재량의 조화 정착
 - 금융산업정책의 재검토

무엇이 문제인가?

금융위 관료의 문제 1: 금융실명제

“신성장 금융산업, 도와주는 금융행정”



금융위원회

수신자 광주세무서장

(경유)

제목 · 질의 회신(광주세무서)

1. 귀 세무서에서 질의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실명법 제5조)은 실명제 실시('93.8.13) 이전에 발생한 비실명 거래시의 금융자산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93.8.13 이후에 개설된 금융계좌는 실명으로만 개설되므로 귀 세무서에서 예시한 계좌는 '98년 이후에 개설되어 차·도명계좌라 하더라도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금융위 관료의 문제 1: 금융실명제(2)

신성장 금융산업, 도와주는 금융행정



금 융 위 원 회

수신자 국세청장(원천세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귀 청 원천세과-938호('09.11.16)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금융기관에 계좌가 설정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나 장외등록법인의 차명주식의 경우 실명전환의무기간('93.8.13~10.12)내에 실명전환하여야 하고, 동 의무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기존비실명자산(실명제 실시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 중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바,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가 없었던 주식이라면 실명전환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한편, 동 의무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차명 여부와 무관하게 실지명의(개인
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된 경우라면 실명전환 및 과
징금 징수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금융위 관료의 문제 2: 미래저축은행

람. 이 회사가 M&A가 여러 번 있고 이 회사 자체도 그렇고 인수하려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해외에 있고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감원이나 증선위 입장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하는 것은 맞는데, 확실한 불확실성이 아니라고 보면 어느 단계에서는 제명을 시키고 우리 증선위나 회의체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의구심이 있는 것은 진행시키고 나중에 또 형사처벌을 받으면, 이 대주주 변경승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해가 발생한다거나 잠재적 범법자에게 어마어마한 특혜가 가는 사안이 아니라면, 그리고 거기에 수반된 투자자보호에 불안요소가 없다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금감원이 판단하고, 금감원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적시를 해서 회의체에

금융위 관료의 문제 2: 미래저축은행(2)

올려 회의체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무방하다고 하면 진행시키는 것이 맞음.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가능성을 다 고려해야 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꼼꼼하게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짚어보고 충실하게 논의하도록 준비하신 금감원이 수고하셨음. 또 국회나 언론 등에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그랬음. 너무 극단적인 보수주의에 입각해서 자본시장에 불확실성이 오랜 기간 남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그런 단계가 되면 중간에 회의체에 한 번 보고를 하고 코멘트(comment)를 받아서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금융위 관료의 문제 3: 유재수

위 분석 과정에서 ‘유재수가 업무 유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시로 운전 기사가 딸린 고급차량을 제공받고, 십 수회에 걸쳐 호화 골프텔을 무상으로 이용할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고가의 골프채를 요구하여 수수하는 등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중대 비리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재수는 가족 중 혼자 공무원 생활을 하여 수입이 많다고 보기 어려운데 두 아들 및 처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S○○ 승용차 2대를 소유하고 두 아들의 유학비와 체류비를 부담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경제적 지원이 있지 않는 한 납득이 되지 않고, 빈번하게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는 본인과 가족의 항공권 구매비용을 다른 금융 업체 관계자가 대준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유재수가 윤건영(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

금융위 관료의 문제 3: 유재수(2)

유재수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유재수의 구명 청탁을 받은 김경수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백원우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유재수로부터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들은 후에는 백원우로부터 유재수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을 파악한 후 유재수에게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을 주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은 유재수의 구명 청탁을 받은 윤건영 역시 평소 업무적 접촉이 잦았던 백원우와 유재수에 대한 감찰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백원우에게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다’라고 말하였고, 유재수의 구명 청탁을 받은 천경득도 이인걸을 만나 그에게 ‘참여정부에서도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유재수를 감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인걸이 그 사실을 박형철에게 알리는 등 유재수의 지인인 위 김경수 등이 다각도로 유재수에 대한 구명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민정수석실의 문제: 금감원 직원 중징계 요구



세계일보



뉴스

이슈

비즈

연예

스포츠

포토·영상

[단독] 靑 중징계 통보받은 금감원 간부는 기획조정국장. 부원장보

기사입력 2020-06-09 17:16:46

기사수정 2020-06-09 20:20:06

가가

靑 민정수석실, 금감원 간부에 2명 중징계 통보 / 감사원, 자료수집 등 사전감사

민정수석실의 문제: 금감원 직원 중징계 요구(2)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은, 그 산하에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특별 감찰반 포함),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을 두고 이들을 지휘·감독하면서

① 국정 관련 여론수렴 및 민심동향 파악,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 주변인사에 대한 관리, ② 국가 사정 관련 정책·조정 업무, 공직 비리 동향 파악, ③ 고위 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정 및 예방, ④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장·차관 및 공공 기관장 복무평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NSC 사무처 직원의 복무점검·직무감찰 업무, ⑤ 국정 현안 법률 검토, 비서실 내 내부 법률 검토 및 자문,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데, 그 중 위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정 및 예방’ 업무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담당하였고,

민정수석실의 문제: 금감원 직원 중징계 요구(3)

<대통령 비서실 직제 규정>

제7조(감찰반) ①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감찰반을 둔다. <개정 2018. 12. 24.>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 2.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3.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② 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개정 2018. 12. 24.>

민정수석실의 문제: 금감원 직원 중징계 요구(4)

<금융위 설치법>

제29조(집행간부 등) ①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이하 "부원장보"라 한다)는 원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하 생략)

국가기관의 문제: 인터넷전문은행 법령 제개정

- 핀테크 발전이라는 명목 하의 금산분리 완화
- K-뱅크 예비인가 과정의 문제점
- K-뱅크 본인가 직전의 은행법 시행령 규정 삭제
- 사후 감독 철저히 하겠다면서 비금융 재벌에게도 은행업 허용
- 현행 은행법 하에서 도입하겠다는 대선공약 위배
- 인가시 약속한 비례적 증거를 없던 일로
- 동일인 규제의 근본을 뒤엎는 법제처 유권해석
- 사후 감독 문제 생기니까, 모든 금융업권에 존재하는 인가 요건 중 일부를 억지로 삭제

제도 공백의 문제: 라임 사태

- 라임 사태의 배경에는 무모한 규제완화가 존재
- 그러나 잘 지적되지 않는 부분은 제도의 공백
 - 설부른 규제완화는 “무늬만 사모”인 사실상의 공모펀드에 대한 감독당국의 개입을 불가피하게 강요
 - 그러나 “형식상 사모”인 까닭에 감독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사후조치 수단은 사실상 부재
 - 특히 라임자산운용의 운용사로서의 자격이 명백해진 이후 라임펀드로부터 라임자산운용을 분리해 낼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부재
 - 라임자산운용은 라임펀드를 계속 운용하며 195억원의 횡령까지 일으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문제점의 요약

- 정치금융 팽배
 - 천경득 선임행정관 발언의 의미:
 - 김조원 민정수석의 금감원 감찰의 의미:
 - 미래저축은행의 골든브릿지 증권 인수의 의미:
 -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및 제도 변경의 의미:
- 정치권의 포획 가능성
 -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 DLF 관련 금융회사 임원 징계
- 언제나 문제 많은 금융산업정책의 만연
 - 라임 관련 자산운용업 규제 완화

정치금융의 청산: 금융감독원의 자율성 확대

-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감독제도의 개편
 - 금융위 해산하고 쌍봉형 체제 도입
- 그러나 감독제도 개편을 못한다면 최소한 금융감독원의 자율성 확대라도 정착시켜야 함
 - 지금은 금융위, 대통령 비서실이 오히려 정상적인 감독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휘방놓는 형국
 - 혹시 금융위와 대통령 비서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포획되었다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야기
 - 중앙은행의 독립성까지 미치지 못하는 못하더라도 **금융감독업무 수행의 자율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긴요

행위감독기구의 감독역량 확대

- 부보 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 감독은 일단 정착
 - 소위 “Type I 금융기관”에 대한 prudential regulation은 일단 궤도에 진입
 - 다만 금융그룹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와 체제적 위기에 대한 대응 구조만이 불비 상태
- 상대적으로 행위감독에 관한 감독 인프라 열악
 -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탈 은행화가 진전될수록 자본시장 관련 업종에 대한 감독수요가 폭증
 - 정치권의 부정 부패 역시 자본시장을 이용할 가능성
 -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 역시 자본시장 쪽에서 빈발
 - 그러나 자본시장 감독 역량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
- 따라서 행위감독기구의 감독인원을 대폭 순증 시키고 감독역량의 수월성 제고에 투자해야 함
 - 제한된 정원과 자원 속에서의 재배치가 아니라 **감독 자원의 순증**이 필요
 - 다양한 연수기회 확대 등으로 **감독역량 제고**도 필요

준칙과 재량의 조화 정착

- 행위감독을 선진화하려면 준칙과 재량 사이의 조화 정착이 긴요
 - 장기적으로 rule-based supervisio에서 **rule-based + discretion-added supervision**으로 이행해야 함
 - **Rule** 은 금융감독의 원리와 원칙을 매우 추상적, 포괄적으로 천명하여 예외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 **Discretion** 은 주어진 금융감독의 rule 하에서 수시로 변화하는 다양한 일탈 행위를 융통성 있게 규제
 - 재량권의 남용은 rule을 통해 견제
 - 복지부동은 재량권을 자유재량이 아니라 **기속재량 (재량을 사용해야 할 의무)**화 하여 처리

금융산업정책의 재검토

- 선부른 금융산업정책의 추진은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금융 스캔들을 야기하였음
 - K-뱅크 자산 부실화, 토스 금융사고
 - 자산운용업 규제 완화와 라임 사태
- 따라서 규제완화에 기반을 둔 금융산업정책의 추진 행태는 심각하게 재고해 볼 필요
 - 인터넷전문은행 정착을 위해 자산 건전성 규제 완화?
- 금융산업은 **rule의 추상화와 감독당국의 (기속)재량 확대의 속도**에 맞추어 자생적으로 제도의 변화를 경험하도록 유도할 필요
 - 금융산업정책의 수단은 금융규제 완화가 아니라 **정부의 세제 지원 등을 근간**으로 할 필요